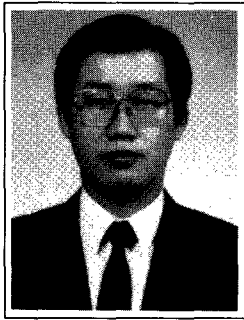


# 대북 경수로 사업의 추진경위와 전망

황 하 수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 부장



## 대북 경수로 사업의 의의

대북 경수로 사업은 북한에 건설하게 될 원자력발전소가 한국 표준형 원전일 뿐만 아니라, 이 건설 사업을 일괄 도급 맡은 주계약자가 우리 기업인 한국전력공사라는 점에서, 사업의 전면에 걸쳐 우리 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건설에만 10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고, 수많은 우리의 기술자들과 장비·물자가 북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남북 협력 사업이므로,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현재 KEDO는 한국·미국·일본 등 원회원국 이외에 일반 회원국으로서 핀란드·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칠레·아르헨티나 등 7개국에 가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이 가입 협정에 가서명하였다(97. 5. 15).

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 해소에 국제사

회가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은 현재 식량난·외화난·에너지난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난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은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과 남북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대북 경수로 사업의 추진 경위

### 1. 북한 핵문제의 대두

대북 경수로 사업은 수년 전에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 60년대 초 옛 소련의 지원 아래 기술 훈련을 받아 원자력 연구 기반을 조성해 오다가,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미 자체 기술로

**대** 북 경수로 사업은 지난 94년 10월 21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북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국·미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2기의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개발 의혹의 초점이 되어 왔던 5MWe 연구용 원자로 등 관련 핵시설들을 동결·해체하고, 플루토늄 추출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봉인 및 제3국 반출 등을 이행하게 된다.

연구용 원자료를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85년에 북한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료와 기술을 옛 소련으로부터 지원 받기 위해 「원자력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이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는 옛 소련의 요청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NPT 가입에 따라 당연히 이행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혹을 사던 중, 89년 프랑스의 상업 위성이 촬영한 영변의 핵시설 사진이 공개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크게 증폭되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91년 남북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JNCC)」 협상은 13차례에 걸쳐 지속되었으나, 남북간의 상호 사찰에 대한 북한측의 비타협적 태도로 인하여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한편 92년에는 북한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92년 5월부터 6회에 걸쳐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 실시되었다.

사찰 결과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 측정치간의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북한은 1회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찰 결과 수 차례에 걸쳐 보다 많은 양을 추출하였고, 신고한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재처리 시설로 판명된 것이다.

국제연합(UN) 및 국제 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하고 정상적인 사찰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고, 북한은 이에 불복하여 전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93. 3. 12)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으로써, 한반도는 긴장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과거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실험용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감행, 핵무기 원료 획득을 위한 재처리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태세를 보이자,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 2.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상호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파행으로 치닫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정책 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

다.

우선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목표로, 고위급 회담 대표 접촉과 이어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측 제의를 거부하고 '특사 교환'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특사 교환 주장을 수용하고, 이를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특사 교환을 위한 8차례 실무 접촉은 북측 대표의 '불바다' 발언으로 무산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직접 대화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편 남북 대화 추진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정부는 IAEA와 UN 등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따라 93년 4월 IAEA 이사회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였다.

93년 5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NPT 체제의 보편성과 NPT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지지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 특히 IAEA의 대북 협의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간에 핵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협상이 시작되었다.

1차 미국·북한 협상(93. 6)에서는 북한의 NPT 잔류가 합의되었으나, 그 후 북한의 IAEA 사찰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2차 협상부터는 난항을 거듭하였다.

결국 우리 정부의 '민족 발전 공동 계획 차원에서의 대북 경수로 지원 용의' 천명(94. 8. 15, 대통령 경축사)을 계기로 급전전, 3차 미국·북한 협상(94. 8~10)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구도인 「제네바 합의」가 94년 10월 21일 도출되었다.

### 3. 제네바 합의와 사업 추진 체계 확립

94년 9월 23일부터 재개된 미국·북한 3단계 협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 구도인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여기서 채택한 기본 합의문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기본 합의문(Agreed Framework)과 기본 합의문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거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된 비공개 합의문(Confidential Minute)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주요 골자는 <표 1>과 같다.

제네바 미국·북한 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의 근

원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특별 사찰 시기가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는 다소 뒤로 미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두 개의 미신고 시설을 군사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 사찰 문제를 이유로 NPT 탈퇴 선언을 한 이래 최초로 북한이 특별 사찰을 수락함으로써, 북한의 과거 핵활동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흑연 감속로 등 핵활동 동결 및 추후 해체 조치는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방대한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선 이 업무를 전담할 범정부 차원의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통일원에 설치하였다(95. 1. 23).

이와 함께 제네바 합의 내용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건설될 경수로의 재정과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미국·일본 등과의 협의를 통해 95년 3월에 뉴욕에서 공식 발족시켰다.

KEDO는 한국·미국·일본 대표로 구성된 집행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여타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총회와 행

<표 1> 제네바 합의의 주요 골자

-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1,000MWe × 2기) 건설 지원
-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실험용 원자로 등 핵시설의 동결 및 해체
-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핵연료봉의 안전 보관 및 장차 제3국 이전
- 핵시설 동결에 따른 대체 에너지(중유) 제공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 대화 재개
- 미·북 연락 사무소 개설 등 미·북간 정치·경제 관계 정상화

정 및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KEDO의 주요 임무는 북한에 1,000MWe급 한국 표준형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2기의 공급과 재원을 조달하고, 경수로 1호기 완성시까지 대체 에너지(중유) 공급을 담당하며, 기타 제네바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제반 필요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다.

### 경수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전망

#### 1. 경수로 공급 협정의 체결 및 후속 의정서 협상

가. KEDO·북한 경수로 공급 협정  
제네바 기본 합의 서명시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협정을 6개월 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미국·북한간 전문가 회의가 세 차례 개최되었다.

이들 회의에서는 경수로 노형과 경수로 제공에 있어서 중심 역할(주계약자)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미국은 정치적·재정적·기술적으로 한국의 중심 역할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한국 표준형 경수로가 북한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비난하였다.

제네바 기본 합의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95년 4월 21일에 이르도록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협상 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핵동결 해제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미국·북한 준고위급 회담을 열게 되었고, 북한은 여기서 현실적으로 한국 표준형 경수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결국 95년 5월 19일~6월 12일간 말레이시아 팔라롬푸르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양측은 주요 쟁점들을 일단 해소하였다.

즉 KEDO가 경수로 사업을 담당하고, 경수로 발전소는 2개의 냉각재 유로를 가진 1,000MWe 발전 용량의 가압 경수로 2기로 구성되며, 노형과 주계약자는 KEDO가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을 위해서 KEDO·북한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팔라롬푸르 합의는 노형 선정과 주계약자 문제를 둘러싼 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KEDO 대표의 일원으로 대북 협상에 직접 나서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노형과 주계약자를 KEDO가 선정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한국

〈표 2〉 KEDO·북한 경수로 공급 협정의 주요 골자

- KEDO가 선정한 2개의 냉각재 유로를 가진 1,000MWe급 가압 경수로 2기 공급(한국 표준형 의미)
- 일괄 도급 방식으로 유상 공급하되, 상환은 각 호기당 3년 거치 17년 무이자 분할 상환
- 북한의 NPT 진위, 핵동결 및 해제, 폐연료봉 국외 반출, IAEA 임시 및 일반 사찰 재개, 안전 조치 전면 이행 등
- KEDO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신·통행, 신변 안전 보장 서비스 및 노무 물자 제공 등

기업(주계약자)이 건설하는 한국 표준형 경수로로 제공받는다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한편 북한과 협상을 벌였던 미국은 공동 발표에 앞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온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한국 표준형으로서 참조 발전소는 울진 3·4 호기가 될 것이며, 한국 기업이 주계약자로 설계·제작·시공 및 사업 관리 등 경수로 사업 전체를 책임질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팔라롬푸르 발표 당일, KEDO는 서울에서 집행 이사회를 개최하고, 동 합의가 경수로 사업 이행의 기본 원칙인 한국 표준형 경수로의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팔라롬푸르 합의에 따라 공급 협정 체결을 위한 KEDO·북한간 회담이 시작되어, 고위급 회담과 전문가 회담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마침내 95년 12월 15일 우리측 입장을 대부분 관철한 공급 협정 문안에 합의하였다(표 2).

북한은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 문제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태도를 보였

다. 협상의 막바지까지 송배전 시설, 핵연료 성형 공장, 항만 부두 개선 등의 추가 공급과 흑연 감속로에 대한 기투자분 당감 등 불합리한 요구를 주장하였으나, 통상적인 원전 건설 관례와 울진 3·4호기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우리측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결국 북한이 이를 철회함으로써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나. 후속 의정서 협상

공급 협정 체결 당시 KEDO와 북한은 그 세부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후속 의정서(10여개)를 단계적으로 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6년 4월 8일부터 뉴욕에서 특권·면제 및 영사 보호 의정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4월 16일부터 통행·통신 의정서 협상도 병행하였다.

동 협상에서는 한국·미국·일본 3국 정부 대표 및 관계 전문가가 KEDO측 대표로 참가하였고, 북한측에서는 외교부 및 원자력총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특권·면제 및 영사 보호 의정서 협상에서는 국제 기구인 KEDO의 영



한국전력공사가 제작한 북한의 신포 경수로 원전 조감도

사 보호 기능 수행 문제와 KEDO 계약 인원 에 대한 북한의 재판 관할권 배제 및 체포·구금 금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우리측은 우리측 인원의 철저한 신변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 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한달 보름만인 5월 22일 타결을 보게 되었다.

한편 통행·통신 의정서 협상에서는 독자 위성 통신망 구축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왔으나, 결국은 우리측 입장이 반영된 문안에 합의하고 6월 14일 가서명하게 되었다.

그후 7월 11일 뉴욕에서 영사 보호, 통행, 통신 등 3개 의정서에 대한 정식 서명 절차를 마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어 2단계 후속 의정서 협상으로 부지 및 서비스 의정서 협상이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북한 묘향산 지역에서 1차로 개최되었으나, 완전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8월 22일부터 뉴욕에서 협상을 재개하였다.

동 협상에서는 북한측이 제공하는 노동 등에 대한 가격 설정 문제로 협상이 상당 기간 공전되어 왔으나, 9월 18일 발생한 강릉 앞바다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협상 입지가 약화된 북한은 서둘러 협상 종결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6일 공동 문안 확인 작업만 마치고 정식 서명은 유보해 오다가, 96년 말 북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한 시인·사과 후인 97년 1월 8일 뉴욕에서 서명·발효되었다.

97년 3월 18일부터는 뉴욕에서 채무 불이행시 조치 의정서 협상을 개시하였다.

동 협상에서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 비용에 대해 상환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될 벌칙금 (penalty)을 중심으로 협상하였다.

북한측은 KEDO측이 경수로 건설 공사를 지연할 경우 북한측이 입게 될 재정적 손실도 같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관련된 문제는 향후 논의될 것이라는 우리측의 입장을 수용하여 협상 개시 약 45일만인 97년 5월 2일 양측이 가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타결된 6개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향후 KEDO와 북한은 양측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품질 보장 및 보증」, 「훈련」, 「인도 일정」 등 잔여 의정서에 대한 후속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6개 의정서의 타결로 경수로 건설 공사 착공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후속 의정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실무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즉 남북간 우편·통신 연결을 위한 제반 절차, 입출국 및 해로 이용 절차, 북한측 제공 노동·물자 범위 및 가격 조건에 대한 합의 등 KEDO·

(표 3) 후속 6개 의정서의 주요 내용

<p><b>특권·면제 및 영사 보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 및 KEDO 직원과 회원국 정부 대표의 특권·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기구 및 외교관 수준의 보호</li> </ul> </li> <li>○ KEDO 계약자 인원의 신변 안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의 체포·구금, 재판 관할 및 집행으로부터 원칙적 면제</li> </ul> </li> <li>○ KEDO에 의한 영사 보호 수행</li> </ul>
<p><b>통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로는 베이징-선덕 공항간을 왕래하되, 추후 사업 본격화(기초 굴착 공사 전) 시점이 되면 보다 효율적인 항공로 개설</li> <li>○ 해로는 장비·물자 수송용 바지선 항로와 인원·물자 수송용 통행로 등 2개</li> <li>○ 지정된 지점으로 출입시 무비자 출입</li> </ul>
<p><b>통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 통신 수단 설치·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초기에는 북측 통신 시설 이용</li> <li>- 부지 착공 후 2년 시점부터는 독자적 위성 통신 시설 설치·운영</li> </ul> </li> <li>○ 북측의 우편 서비스 이용</li> </ul>
<p><b>부지 인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 범위 확정 및 부지 인도 절차 규정</li> <li>○ 부지의 배타적 사용 권한 및 자유로운 부지 접근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 인원 부지 출입시 KEDO의 사전 동의 필요</li> <li>- KEDO의 자체 질서 유지권 보유</li> </ul> </li> <li>○ KEDO 물자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보세 구역 지정</li> <li>○ KEDO 인원의 해안 지역 배타적 이용 확보</li> </ul>
<p><b>서비스 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 및 계약자와 북한 회사간 합의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북한의 노무·물자·시설 및 기타 서비스 이용</li> <li>○ KEDO측 금융 서비스 제공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서 발효 후 비북한 은행의 대표 사무소 및 합영 은행의 설치·운영 허용</li> <li>- 향후 비북한 은행 및 여타 금융 기관의 부지 내 지점 설치·운영</li> </ul> </li> </ul>
<p><b>채무 불이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미상환시 'KEDO 자금 조달 비용 + 3%(또는 2%)'의 벌칙 금리(penalty) 적용</li> <li>○ 미상환 30일 후부터 언제든지 미지급 잔액 전부(또는 일부)를 상환기한 도래와 관계없이 미리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이익 상실 조항 규정</li> <li>○ 기한 이익 상실 발동으로 인한 미지급 잔액을 미상환할 시 다시 벌칙 금리 적용</li> </ul>

북한간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97년 4월 부터 KEDO·북한간 실무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 2. 경수로 건설 공사 추진

가. 부지 조사 실시  
경수로 건설 예정 부지(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금호리 지역)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지 지질·환경·해양 등 제반 요건에 대한 부지 조사 활동이 95년 8월 이후 실시되고 있다.

KEDO가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전 용역(pre-project service)으로 의뢰하여 부지 조사가 지금까지 6차례 실시되었고, 이를 위해 우리측 인원의 상당수가 북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해 오고 있다.

현재는 약 30여명이 97년 3월 1일부터 제7차 부지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6차례의 부지 조사

결과 신포 지역이 원전 건설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현재는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PSAR) 작성을 위한 세부 지질 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96년에 발효된 「특권·면제 및 영사 보호 의정서」에 따라 전원이 KEDO 인원 자격으로 방북하였고 그에 따른 신변 보장을 받고 있다.

나. 부지 준비 공사 착공

향후 부지 조사가 끝나고 KEDO 측 부지 조사 보고서가 부지 선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지 의정서」에 따라 부지를 인수하게 된다.

그리고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반 의정서가 타결됨에 따라 공사 착공이 가시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경수로 건설에 따르는 소요 재원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KEDO의 용역을 받아 경수로 개략 사업비(ROM)를 산정하였고, 이를 작년 7월 KEDO에 제출하였다.

KEDO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개략 사업비(ROM)를 TSC(기술 자문 회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KEDO 검토(안)으로 하여 3국 집행 이사국에 제시하였다(97. 2).

현재는 각 집행 이사국들이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회원국간에 그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협의하

는 단계에 와 있다.

개략 사업비(ROM)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한국·미국·일본 정부간 재정 분담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우리의 중심적 역할에 걸맞는 재정 부담을 하되 미국·일본측의 최대한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비 규모에 대한 확정 및 이를 토대로 각국간 재원 분담 규모를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재원을 확보 후의 착공 추진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핵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있고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봉인 작업(5월 말 현재 80% 진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 착공 등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데 대하여 의구심과 불만감을 표시해 왔다.

우리 정부 역시 공사 착공 지연이 우리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차원에서, 우선 부지 준비 공사만이라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부지 준비 공사는 부지 정지 및 근로자 숙소, 부지간 통행로 등이 포함되며, 약 1년 정도의 기간에 약 4,500만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지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 우편 및 통신 연결, 긴급 상황시 대책, 입출국 및 해·공로 절차 등 기타결된 의정서의 후속 조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KEDO·한국전력공사간 부지 준비 공사 계약(PWC) 및 KEDO 신포사 무소 등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KEDO 실무 협상단이 지난 4월과 6월 2차례 북한을 방문, 협상하고 돌아왔다.

**맺는말**

대북 경수로 원전 건설 지원 사업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남북간 냉전적 상황을 타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바탕을 마련하여 장차 민족 공동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원자력 산업계의 능력과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성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 경수로 사업은 끊임없는 인내와 협상을 통해서 부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타 해외 원전 건설의 경우와는 달리 정치적 합의에 따라 시작되었고, 북한이라는 파트너의 불확실성과

KEDO 내부의 다자간 이해 관계를 고려할 때 큰 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과거 미국·북한 제네바 합의 당시에 제기되었던 우려와 불신은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

앞으로 경수로 사업은 과거에 비해 정치적 논리보다는 순수한 경수로 원전 건설에 따르는 사업적 논리를 기초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수로 건설은 거의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불확실한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권력 이양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남북한 군사적 긴장의 상존 등은 경수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의 성공적 이행은 반대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개혁·개방화시키고 한반도 평화 유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대북 경수로 사업이 단순한 북한 핵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전략 사업으로서 훗날 선견지명이 있는 훌륭한 사업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